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2.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박 미 라 안 제 현		044-202-1790 044-202-1797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과 장 담 당 자	이 창 희 고 성 우		044-201-3970 044-201-4636
경찰청 수사과	과 장 경 정	손 제 한 김 우 석		02-3150-2068 02-3150-262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CK) 대처상황 점검회의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증 환자 병상대책, ▲추석명절 대비 철도 등 대중교통 관리방안, ▲태풍 대처상황 보고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증 환자 병상대책, ▲추석명절 대비 철도 등 대중교통 관리방안, ▲태풍 대처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추석 민생대책을 수립할 때 방역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에게 방역과 민생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도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소관 부처에게 코로나19의 대응과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은 오랜 싸움이지만 태풍 대비는 단기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중심으로 경계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나중에 수습하는 것보다 낫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9호 태풍 ‘마이삭’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큰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게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야간시간 대에 편의점에서의 취식, 음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9월 1일(화)부터 모든 편의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 이에 따라 어제(9.1.화) 편의점이 방역수칙 의무 대상시설임을 문자와 유선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9월 6일(일) 자정까지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전수점검 할 계획이다.
 - 한편, 코로나19·가정·직장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9월 1일(화)부터 9월 13일(일)까지 비대면(www.서울시마음건강박람회.com) 방식으로 ‘청년마음건강 랜선 박람회’를 개최한다.
 - 인천광역시도 지난 주말 동안 음식점과 카페를 집중 점검하였다. 음식점·카페가 밀집된 지역은 21시 이후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으며, 포장이나 배달 영업을 가능한 음식점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9일(수)부터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1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22개소도 9월 6일(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 경기도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몰리는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코너)의 운영을 9월 1일(화)부터 중단토록 하였다.
-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 한편, 지난 주말 총 7,549개소 교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32개소는 집합금지 조치하였다.

2 중증환자 병상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중증환자 병상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위중·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고,

* (8.27) 58명 → (8.28) 64명 → (8.29) 70명 → (8.30) 79명 → (8.31) 104명 → (9.1) 124명

- 수도권 교회와 집회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이 40%를 넘는 등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공공,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이번 달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110개 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기존에 일반 환자도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중증 환자만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한다.

- 지정된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충분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부와 협력하여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에 군 인력을 지원하고,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간호사 양성*도 추진한다.

* 11개 교육기관, 251명 교육생 선정(~8.30.), 교육시작(9월~12월)

- 이와 함께 이동형 음압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장비도 즉시 지원*하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 이동형 음압기(8.26~31) : 수도권 병원 4곳 21대, 전남·광주 지역 의료원 3곳 44대
인공호흡기 21대(8.31~9.10), 에크모 7대(9월 중순)
- 다음으로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각 권역별로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각 권역별로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여 권역내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이들이 권역 내 환자 분류와 병상 배정을 총괄 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배정하고 회복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전원하여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하는 등 9월까지 110병상, 연말까지 103병상을 차례로 추가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총 496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 하여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3 추석명절 철도 등 대중교통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명절 철도 등 대중교통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명절의 열차 좌석 예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당초 9월 2일(수)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철도공사의 일반인 대상 사전예매를 1주일 연기하고, SR(에스알)의 사전예매도 당초 일정보다 1주일 연기한다.
 - * (당초) 철도공사 9.1~3, SR 9.8~10 → (변경) 철도공사 9.8~9.9, SR 9.15~17
장애인·경로자 대상 사전예매는 9월 1일 실시
 - 열차 내 거리 두기를 위하여 창가측 좌석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교정과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1주일 후 재개되는 사전예매에서는 창가측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비율을 50%로 낮추고,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매를 실시하지 않은 좌석의 판매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승차권 사전예매 연기와 판매비율 축소를 적극 홍보하여 추석 승차권 예매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4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갑룡)로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을 수사하여, 957명을 기소하였으며, 746명을 수사 중이다.
 - 특히,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 또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26.)’ 이후, 총 385명을 수사하여 198명을 기소하였고 145명을 수사 중이다.
 -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당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9명을 구속하였다.
- 한편,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역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저해하는 ‘방역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 관련, 총 243건 수사하여 246명 검거
-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07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9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909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5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0명을 적발하여, 이 중 8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 9월 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7,266개소, ▲음식점·카페 2만3199개소 등 41개 분야 총 5만8759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32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24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400개반, 2,18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6 제9호 태풍 '마이삭' 대처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대처상황을 점검하였다.
 - 9월 2일(수) 06시 기준 태풍 '마이삭'은 서귀포 남쪽 약 360km 해상에서 시속 22km로 북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 태풍은 9월 2일(수) 21시경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 9월 3일(목) 3시경에 부산 부근 육상에 상륙한 후 6시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위기경보 '경계' 및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통제, 사전대피 지시와 현장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댐과 저수지를 방류하고 하류지역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관시설의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 만조시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해안가 저지대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선 설치 등 사전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과 산간계곡 야영객에 대한 사전대피 실시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진행하였다.
 - 시가지 지하차도, 산책로 등 침수위험지역 예찰 및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하천 내 가물막이 등 각종 지장물을 제거하는 한편, 배수펌프장 등 우수 배수시설을 사전 점검하였다.
 - 강풍·풍랑 대비하여 공사장 타워크레인, 첩탑, 옥외간판 등 지상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선박·

어선·어망 등 수산시설 인양·고정 및 방파제, 선착장 등 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 또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발방지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선별진료소의 일시 철거·결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이재민 주거시설, 대피소 내 거리두기 및 방역물품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진행하였다.
-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 경보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태풍 상황을 알리는 한편 위험상황이나 위험지역에서의 행동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식당·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집합금지 및 교습소 집합제한은 8.31일 0시부터 시행

구분		조치사항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이용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 교	
학 교	○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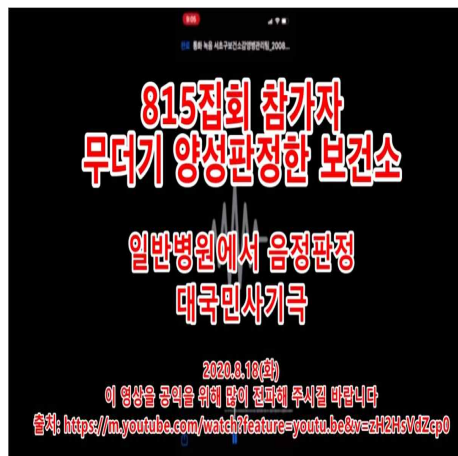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양성판정 했다는 내용 관련 >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받은 재검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의 통화를 담은 영상

- 1) 검체 채취는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채취
- 2) 검사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검사 과정은 PCR 기기에 실시간 기록

☞ 의료진 양심에 따라 진행되며, 의료인의 판단결정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 (8.19. 방대본 브리핑 중)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사랑제일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가
보건소에서
확진 받고 백백원에서
재검했는데 음성판정
오늘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나오시는분들은 무조건
병원에서 재검 받으세요

오전

▲ 보건소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이를 뒤 병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 1) 두 검사는 모두 동일한 검사기관에서 진행
- 2) 잔여검체 활용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보건소 검체 양성, 병원 검체 음성)
- 3) 양성 판정 후 2일 후 검사한 것으로, 바이러스량 감소에 따른 결과 변화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시대*****)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